

교통약자 이동 차량인데 ‘미터기 조작’ 의혹 파장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탁 운영 센터 문제 제기
“운행시간 늘려 운행격려금 부당 수령” 내부서 제보
조작 의심사례 5건… 道, 센터 측에 ‘전수조사’ 요구

제주지역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미터기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의심 사례에 더해 또 다른 조작 정황이 없는지 전수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이다. 현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8대로, 운전원 83명이 고용돼 이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미터기 조작이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실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구성된 센터 이용자위원회도 이런 민원을 센터장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운전원이 미터기 조작을 자동이 아닌 수동 방식으로 바꿔놓고 차량 이용자가 요금을 결제하고 내렸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태우고 있는 것처럼 조

작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터기 조작 여부는 바로 확인되지 않았다. 센터 측은 같은 달에 미터기 조작을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재설정 작업을 거쳤지만, 조작 여부에 대한 1차 점검은 5월, 단 4일치 운행 기록에 한했다. 이에 이용자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 7-9월 운행 기록을 점검해 이용자 하차 시간과 결제 영수증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의심사례 5건을 적발했다. 실제 운전원이 미터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보가 들어오기 전에 센터가 미터기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터기 조작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데다 운전원이 운행격려금(운행시간 연장)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지만 사전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교통항

공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센터가 관련 제보가 있기 전인)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미터기 회사에 수동에서 자동으로 강제 전환(미터기 재설정)을 의뢰했었다”면서 “지난해 9월 미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이미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이전인) 2022년에는 장애인 고객들의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차 버튼을 제대로 누르라는 공문도 시행했었다”면서 “상식적으로 제보가 들어가기 전에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최근에야 이런 문제를 인지한 제주자치도는 센터에 특별교통수단 미터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날 한 의원의 질의에 “(민원 제기 이후 미터기 교체 등을 통해)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같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운행 내역을 전수조사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도감사위, 사회복지 분야 등 보조금 특정감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에 들어간다.

20일 제주도 감사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뤄지는 보조금 특정감사에서는 2021-2023

년 26개 부서에서 지원한 사회복지, 보건, 복지 분야의 민간보조금 전반에 대해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조금 추진 단계별 절차 이행 및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

부, 보조금 집행·회계처리 적정 여부, 보조금 지원 시설·장비 등 중요 재산의 관리 실태,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사업의 수혜가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씩어가는 콜라비 20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한 농경지에서 수확을 앞둔 콜라비가 계속되는 비날씨에 씻어들어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민박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도움될 것”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KCTV·제주의소리·TBN
‘제주 민박, 살릴 수 있나’ 주제로 네 번째 토론회 개최

제주 민박 활성화와 빈집을 활용한 제주살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중간간 일대에 조성 예정인 한화 에일포레스트 사업과 관련해 도내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원회 소속 양영수 의원(진보당, 제주시 아라동)은 “전국적으로 농어촌에 빈집이 많고 특히 제주는 13.5%(전국 평균 7.9%)로, 빈집을 활용해 제주살이와 연계한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안팎을 때는 빈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의회 차원에서도 에일포레스트는 (공사)시작 전이기 때문에 그(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약속을 받고 거기에 대해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을 위해서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위법에 대한 변화 요구와 함께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박건도 청년활동가는 “에일 중간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건설된다는데, 민박업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도내 민박업 자체가 흔들리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의 진행을 맡은 조선희 제주와미래연구원 이사는 “스쳐 가는 제주가 아니라 체류하는 제주, 그것이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 유입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제주 민박업의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법,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교통안전지수 최하위 수준… 4면 / “시교과서 속도조절 필요”… 5면

도민의 선택으로 빛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더 촘촘한 자치, 더 가까운 행정, 더 특별한 제주!

현행 행정체제

2개 행정시
(법인격 없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3개 기초자치단체
(법인격 있음)

시민이 직접 시장·시의원을 뽑습니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3개 기초자치단체 간 건전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 민주성 회복, 참여성 강화, 참정권 확대

● 신속한 민원 처리, 민생현안 효율적 대응

● 지역 맞춤형 정책 강화, 균형 발전 도모